

# 바람 잘 날 없는 광주과기원...과기부 감사 이어 수사 받나

### '부속기관장 채용·교수 임명 비위' 등 드러나 4명 징계 일부 교수 "숨방망이 처벌"...전 보직 교수 등 8명 고발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직 간부 등 8명이 '짜 맞추기'식 부속기관장 채용 등 비위로 과기부 감사를 받는데 이어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과기부 감사결과에 따라 GIST가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했으나, 일부 교수가 비위행위에 걸맞은 엄정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GIST 소속 A교수는 "GIST 전·현직 고위간부와 전 보직교수 등 8명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명예 훼손 등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

다"고 19일 밝혔다.

A교수는 "GIST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교직원들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엄정 처벌해야 함에도 채용 비리가 아니라며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숨방망이 처벌했다"면서 "GIST의 미래와 정상화를 위해 사법기관이 비리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교수가 고발장에 적시한 인사는 모두 8명으로, GIST가 지난 6월 징계의결한 전직 보직교수 4

명과 채용 등에 연루됐으나 징계를 받지 않은 3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 4명은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경고(2명) 등 징계를 받았다.

징계와 감봉 처분을 받은 2명은 부속 기관장에 특정인을 영두에 두고 지원 자격을 과도하게 설정해 다른 지원자의 응모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 대학 고위층의 지시를 받고 채용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이들이 특정인을 초빙석좌교수로 임명하라는 고위층의 지시를 받고 임명을 추진하다 전공과 이력이 부설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자체 심의에서 부결되자 또다른 부설기관의 원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전형형을 추진했다"면서 "이를 통해 특정인을 선발

하고 부당하게 판공비 1200여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과기부 감사결과 GIST는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을 명예 석좌교수로 임명하는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절차를 어기고 재심을 열어 임명권을 통과시키고 부당하게 전문료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당 교수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GIST 산하기관은 300여만원에 달하는 명예 석좌교수의 사택 관리비 등을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다른 대학 고위층은 A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A교수는 "대학 고위층 인사가 많은 교수들이 참

석한 위크숍에서 '교꾸라지(교수+미꾸라지)라는 비속어로 공익신고를 비하하고 심각하게 인권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대학 고위층은 광주일보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정인사 임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전 고위층 인사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참고인 조사를 거쳐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GIST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한 달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시(實地) 감사를 받고 지난 2월 말 결과를 통보받은 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19일 오전 영광군 대마면에서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가 쌀값 안정화를 촉구하며 논을 갈아엎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제공>

## 쌀값 폭락에...광주·전남 농민 '논 갈아엎기 투쟁'

### 20만t 즉각 격리·쌀값 보장 촉구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정부에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전농 광주전남연맹(단체) 등은 영광군 대마면에서 '논 갈아엎기 투쟁'을 열고 "정부는 시장 격리 20만t을 즉각 시행하고 쌀 수입을 중단하라"

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2000여㎡ 가량의 논을 갈아엎는 시위를 진행했다.

단체는 "통상적으로 단경기(7월-9월·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어지는 때)에는 가장 가격이 높아야 하는데 올해 1월 80kg 20만원선 붕괴를 시작으로 계속 하락해 8월 5일 기준 17만 8476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시장격리 20만t(2023년 쌀) 시행과 태국과 미국 중국 등에서 매년 41만t씩 이뤄지는 쌀 수입을 중단할 것, 지난해 6월 정부가 밝힌 직불제 예산 5조원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2024년도 쌀 40만t과 2023년도 쌀 5만t 매입을 발표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전남 맞춤형 치안으로 평온한 일상 만들 것"

### 모상모 전남경찰청장 취임

모상모(57·사진) 신임 전남경찰청장은 "섬이 많고 동·서간 특성이 다른 전남에서 지역 맞춤형 치안으로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19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각 부서 과·계장들을 대상으로 취임식을 갖고 "지난 2022년과 2023년 제감안전도 조사에서 연속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남도민들이 보여준 신뢰에 보답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전남은 삼·산간 지역이 광범위 해 범죄와 재난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존의 대응체계를 고도화·체계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도 확고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탈법, 집단이기주의 등 법을 악용하는 실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해 선진국 수준의 교통질서를 확립해 사망사고를

줄이고 마약, 음주운전, 학교 주변 사고, 악성사기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등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팀장 중심의 수사체계 구축, 수사관 개개인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현장 토론회 등을 활성화

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 모 청장의 계획이다.

모 청장은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잘 살피고 인권을 보호하며 동료를 배려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도 빠뜨리지 않았다.

합병 출신인 모 청장은 학다리고등학교,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간부 42기로 임용됐다. 지난 2017년 총경으로 승진해 경기남부청 안산상록경찰서장, 경찰청 경무담당관, 서울경찰청 서울해오경찰서장, 분당경찰서장을 역임하고 올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태양광 신규 발전소 중단은 한빛원전 수명 연장 필수"

### 광주 환경단체, 정책 철회 촉구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이 2031년 12월 말까지 광주·전남에 신규 태양광 발전소 등의 설치를 막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3개 환경단체는 19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등에 신규 발전소 허가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5·30 계통포

화 해소대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부터 2031년 말까지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 등 전국 205곳 발전소를 계통관리 발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통제 이유로 포화된 송전과 배전망을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5·30 계통포

화 해소대책은 광주·전남에는 향후 7년 4개월 동안 태양광 등 신규 발전소 설치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계통 통제는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필수"라며 "광주·전남의 경우 계통연계의 여분이 있음에도 원전과 석탄·가스발전의 최소발전량을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을 위해 증가시켜야 할 태양광발전소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서울대 가족' 인증 스티커는 학벌주의 조장"

### 광주시민단체, 인권위에 진정

광주지역시민단체가 가족 스티커 배포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서울대 로고를 활용한 스티커를 제작해 학생 가족에게 배포한 것은 학부모에게 '자식의 입시 성공은 부모의 업적임을 과시하라'고 부추긴 것"이라고 진정제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인권위에 대해서도 "학벌주의에 따른 사회에서는 대학 이름으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된다"며 "능력과 노력보다 특권과 차별이 일상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학벌주의를 조

장하는 행태에 엄중히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대 발전재단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서울대 재학생 가족에게 서울대 로고와 'PROUD FAMILY(자랑스러운 가족)', 'PROUD PARENT(자랑스러운 부모)' 문구가 적힌 차량용 스티커를 기념품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현재 배너는 내려간 상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